

국가결산체계가 16년 만에 대전환된다.

결산보고서 누가 읽을 것인가?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가재정을 보는 눈,
예산집행 중심
→ 지속가능성 중심



재정상태표
개편·현금흐름표
도입·미래부담 분석 강화



과거 결과 정리에서
미래 위험 예측
데이터로 진화



제도 운영보다
이를 읽고 활용할
전문인력 구축 필수



정책과 정치를 논하면서
국가결산은 읽지 않는다고

2026년부터 정부는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체계를 적용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양식 변경이나 회계 기준 수정이 아니다. 국가재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국가결산은 세입과 세출 중심의 예산 집행 결과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복지 확대·국가채무 증가 시대에는 단순한 예산집행 정보만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기존의 세입·세출 중심 결산체계 위에 자산·부채·현금흐름·미래부담 분석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정부 내부 회계시스템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올해부터 공개될 새로운 결산자료를 국회, 언론, 학계, 시장, 국민이 실제로 어떻게 읽고 활용하느냐가 향후 개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

되어도 활용되지 못하면 형식적 변화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단순히 정보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재정정보를 통합·단순화하고, 국가채무·순채무·현금흐름·미래부담 등 핵심 재정위험을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데 있다.

“퍼주기 복지”라고 걱정만 하십니까.
국가채무 숫자만으로는 재정위기를 알 수 없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국가재정상태표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부채 등 민간기업형 장·단기 중심 구조가 유지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정 정리가 아니다. 국가재정을 ‘유동성 중심’에서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읽는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특히 부채를 단순 총액이 아니라 차입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국가채무와 미래 부담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재정 논쟁은 대부분 국가채무 규모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

<표 1> 국가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자산 체계	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등 6개 분류	금융자산·무유형자산·기타자산의 3개 체계로 단순화
부채 체계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장기충당부채·기타부채	차입부채·충당부채·기타부채 중심으로 재구성
핵심 변화	장·단기 중심 분류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 중심 분류
정책 의미	회계기술 중심	국가채무·순채무·미래부담 분석 강화

로는 단순한 부채 총액보다 “어떤 부채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전략산업 투자처럼 미래 생산성과 세입 기반을 높이는 자산 형성과 연결된다면 단순 소비성 지출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가 미래 생산성이나 재정여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같은 적자라도 미래 성장기반을 형성하는 투자형 적자와 단순 소비성 적자는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 규모 증가 자체도 더 이상 긍정적 의미만 가지지는 않는다. 실제 활용도가 낮거나 유지 비용만 증가시키는 비효율 자산이라면, 오히려 장기적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국가재정은 단순 규모보다 자산의 효율성과 미래 현금창출력까지 함께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편은 특히 미래 재정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연금충당부채, 사회보험 관련 부담, 우발채무 등은 지금 당장 현금이 유출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과거의 국가결산이 단년도 예산집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읽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현금흐름표의 도입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현금흐름표 도입이다. 이는 단순한 서식 추가가 아니다.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구성 자체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면서, 국가 전체의 실제 현금 조달과 집행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결산은 발생주의 기반 재무제표를 운영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실제 현금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영활동 현금흐름은 국가의 정상적 재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 성장 기반 형성과 연결되며,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국가채무 의존 구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질적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 2> 국가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의미

구분	의미	주요 내용
운영활동 현금흐름	국가의 일상적 재정운영	국세수입, 인건비, 복지지출 등
투자활동 현금흐름	미래 성장기반 투자	SOC, 연구개발, 금융투자, 공공자산 취득
재무활동 현금흐름	국가채무 및 자금조달	국채 발행·상환, 차입금 조달
정책적 의미	단순 지출 규모가 아니라 “재정의 질” 분석 가능	지속가능성과 재정구조 분석 강화

중요한 점은 현금흐름표가 단순히 “현금이 얼마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되고 어떤 활동에서 유출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26년 1월 초 발생한 국방비 미지급 이슈는 이번 현금흐름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예산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연말 세출 집중과 자금배정 문제로 인해 일부 국방 관련 지출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만으로는 국가재정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재정위기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현금흐름과 자금배정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가”만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언제·어디로·어떤 목적에 따라 흐르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이번 현금흐름표 도입은 바로 이러한 국가재정의 실제 흐름과 재정운영의 질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현금흐름표 도입만으로 재정운영의 질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발생주의 국가회계 역시 도입 초기에는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읽고 해석하며 정책 의사결정에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AI 시대, 국가결산은

미래를 읽는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잡하



게 흩어져 있던 주식정보와 보충정보를 국민과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방대한 분량 속에 필요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위험과 구조, 정책 목적과 미래 부담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정돈하고 연결하는 방향에 가깝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만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설명정보와 연결정보가 미래 위험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핵심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AI 기반 분석은 단순 숫자 자체보다 숫자의 구조와 연결관계, 설명정보를 통해 미래 위험과 흐름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국가결산 정보는 단순히 정부와 국회만의 정보가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미래 예측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역시 국가 재정정책, 산업 투자, 국채 발행, 복지 지출, 세수 구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경제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재정지출 구조와 투자 방향은 산업별 성장전략과 시장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구조는 기업의 금리와 자금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앞으로 기업들도 국가결산을 단순한 정부 보고서가 아니라, 미래 경영환경과 산업 흐름을 읽는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국가결산은 단순히 과거 예산집행 결과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이제는 국가결산을 ‘읽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결산체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실제 정책 의사결정과 재정운영에 연결할 수 있는 해석 역량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개편의 의미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단순히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Treasury 중심의 장기 재정전략 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통해 국가채무와 장기 재정위험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미국 역시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통해 정책의 재정 효과와 미래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해외 주요국들은 단순히 “숫자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국가결산 작성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전담 기능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결산과 현금흐름, 장기 재정위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앞으로 국가결산 개편의 성패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방대한 국가재정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하며 정책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단순한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기관을 넘어, 국가결산과 현금흐름, 재정위험, 장기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재정데이터 허브 역할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결국 국가결산 개편의 핵심은 재무제표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숫자를 읽고 해석하며 미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만드는 데 있다.

국가결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결산을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의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간기업 회계와 달리 국가회계와 재정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관련 연구와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국가결산이 AI 시대의 핵심 정책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회계지식만이 아니라 재정·경제·산업·데이터 분석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결국 국가결산 개편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그 데이터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번 국가결산보고체계 개편은 단순히 회계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예산집행 결과의 확인’에서 ‘재정상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올해 공개될 새로운 결산자료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읽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정보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회·언론·학계·시장·국민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정책 논의에 연결하는 일이다.

국가결산은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하는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의 국가결산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